

대통령 오찬·본회의 동시 보이콧… 설 직전 정국 급속 냉각

與 재판소원법 등 처리 ‘강한 반발’
靑 “협치의 자리, 기회 잃어 유감”
정청래 “국민·대통령에게 결례”

12일로 예정됐던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오찬 회동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불참 통보로 취소됐다. 국민의힘은 대통령과의 오찬을 취소한 데 이어, 국회 본회의도 ‘보이콧’을 선언했다. 명절 전 협치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됐지만, 오히려 정국이 급랭된 상황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손으로 등 뒤에 칼을 숨기고 한 손으로 악수를 청하는 것에 응할 수 없다”고 이같이 말했다.

당초 이 대통령은 이날 낮 12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대표를 만나 오찬을 겸한 회동을 하기로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과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처리되자 이를 이유로 불참하겠다고 오찬 1시간 전 발표한 것이다.

이번에 통과된 ‘재판소원법’은 헌법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 오찬 불참 의사를 밝히기 전 생각에 잠겨 있다. /뉴시스

소원 대상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한다’라는 문구를 삭제해, 재판 결과도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시킨 게 특징이다. 대법원은 재판소원법을 두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장 대표는 “어제 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재판소원을 허용하는 법률과 대법관을 증원하는 법률을 일방 통과시켰다”며 “대통령의 오찬이 잡히면 그날이나 그 전날에 이런 무도한 일이

벌어진다. 우연도 겹치면 필연”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고도 제1야당 대표와 오찬을 하자는 것은 밥상에 모래알로 지은 밥을 내놓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며 불쾌감을 보였다.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 직전까지만 해도 오찬 참석 의사를 밝혔던 장 대표가 입장을 바꾼 진짜 이유는 민주당의 법안 강행처리가 아니라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 합당 문제, 2차 종합특검 추천 등 ‘명청 갈등’의 해소의 장에 장 대표가 들러리로 전략할 수 있다는 지도부 내부의 우려가 있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장 대표의 불참 명분으로 법사위에서의 재판소원법·대법관 증원법 등 강행처리를 찾아냈고, 이에 더해 국회 본회의 ‘보이콧’까지 들고 나온 것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된다.

장 대표의 급작스러운 오찬 불참 통보에 청와대는 결국 이날 오찬 회동을 취소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오찬 회동 취소 소식을 전하며 “이번 회동은 국정 현안에 대한 소통과 협치를 위한 자리였다. 그런 점에서 그러한 취지를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잃었다는 것에 깊은 아쉬움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 입장에서 유감스러운 것은, 국회 상황과 연계해서 대통령과 약속된 일정을 취소한 것”이라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홍 수석은 장 대표가 국회 법사위에서 법안을 통과된 것을 이유로 든 데 대해 “국회 상황을 대통령실과 연계해서 설명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면서 “국

회 일정, 국회의 상임위 운영과 관련된 것은 여당이 알아서 하는 일이다. 그 과정에서 청와대가 어떠한 형태의 관여 또는 개입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회동 취소 소식에 정청래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본인이 요청할 때는 언제고 약속 시간 직전에 무슨 결례냐”며 “국민과 대통령에 대한 예의는 눈곱만큼도 없는 국민의힘의 작태에 경악한다. 정말 노답”이라고 직격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장 대표의 대통령 주재 오찬 회동 불참에서 그치지 않고, 이날 오후 예정됐던 본회의에도 불참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아동수당법 개정안, 전세사기 피해자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민생 법안 처리를 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여기에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모든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신청도 고려하고 있다.

설 연휴 직전 ‘협치’ 국면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정부여당의 입법 드라이브에 본격적으로 각을 세워 선명한 대역(對興) 투쟁을 하는 모양새를 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첫 광주전남특별시장 놓고 중진 출마 러시

지방선거 돋보기

⑦ 민주당 텃밭 ‘광주·전남’

지역에 대규모 민관투자·지원 공약
김영록 지사·민형배 의원 2강 체제

민주당 텃밭인 호남은 초대 광주·전남 통합특별시장 선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특히 광주·전남통합특별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우선 처리돼 특별법이 통과되면 광주·전남통합특별시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재정 분권과 위상을 갖게 된다.

◆첫 통합시장 선거 기대감에 광주·전남 중진 대거 출마

광주·전남은 당 내 경선부터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현역 단체장인 김영록 전남지사, 강기정 광주시장부터 이개호(4선·전남 담양군하평군영광군장성군), 신정훈(3선·전남 나주시화순군), 민형배(재선·광주 광산구을)·주철현(재선·전남여수시갑)·정준호(조선·광주북구갑) 의원이 출마 선언을 했다.

후보들은 저마다 광주·전남에 대규

모 민관 투자와 지원을 이끌어내겠다고 공약하고 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이차전지와 에너지 등 첨단산업 분야 55조 원 투자 유치를 이뤄낸 성과를 이어가겠다고 밝혔고, 강기정 광주시장은 AI·미래차·반도체 등 미래산업 육성 정책을 이어가기 위해 출마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개호 의원은 ‘에너지 자주권 선언’과 ‘전력요금 차등제’를 통해 반도체 기업 등을 유치하고 광주(AI·반도체), 전남 동부(소재 생산), 서남(RE100·해양물류), 농어촌(기본소득) 등 4대 권역별 맞춤형 개발 전략을 제시했다. 신정훈 의원은 의정활동을 거치며 혁신도시, 한국전력공사 이전, 한국에너지공단 유치했다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호남으로 이전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형배 의원은 “전남광주특별시를 남부권 신산업 수도이자 메가 도시권으로 육성해 AI·에너지·우주·바이오 산업이 연결된 일자리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주철현 의원은 전남의 재래기간 산업인 석유화학과 철강 산업을 정상화하고 해상풍력·영농태양광으로

‘재생에너지 허브 전남’을 건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정준호 의원은 재생에너지와 소형모듈원전(SMR)을 결합한 에너지 믹스로 RE100을 완성해 기업과 일자리를 호남으로 되돌리겠다고 공약했다.

◆여론조사 결과 현직 지사 VS 의원 ‘2強’ 예측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초대 광주·전남 통합 선거는 김영록 지사와 민형배 의원의 2강(強) 체제로 나타난다.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지난 8~9일 한국방송공사(KBS) 광주방송총국 의뢰로 광주·전남 만 18세 이상 남녀 1609명에게 통합특별시장 선호도를 물은 결과(표본오차 2.4%포인트, 95% 신뢰수준, 응답률 14.1%,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민형배 의원 21% 김영록 전남도지사 19%로, 두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경합하고 있다.

그 뒤로 강기정 광주시장 9%, 신정훈 의원 8%, 주철현 의원 6%, 이개호 의원 4%, 이병훈 민주당 호남발전특별위원



김영록(왼쪽) 전남지사와 강기정 광주시장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김민석 총리와 면담을 기다리며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회 수석부위원장 4%, 정준호 국회의원 2% 등으로 조사됐다. 지지 후보가 없다는 응답은 14%, 모름이나 무응답은 13%였다.

◆전북지사 선거, 조혁당 공천권 배분 설에 한때 술렁

전북도지사 선거도 현직인 김관영 지사가 재선에 도전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이원택(재선·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안호영(3선·전북완주군진안군무주군)이 출마 선언을 하며 치열한 경선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김관영 지사는 지역 방송사와 인터뷰에서 재선 도전 의사를 밝혔다.

다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논의 중 전북도지사 공천권 배분설이 나오면서 지역 정가는 술렁였다. 안호영 의원은 이에 반발해 기자회견을 열고 “사실 여부를 떠나 전북 도민의 자존심을 크게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비판했고, 김관영 지사는 “그런 설이 돌았다는 것 자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굉장히 모욕적인 주장”이라고 말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합당’을 지신 이후로 미루고 ‘선거 연대’에 힘을 합칠 가능성이 있어 논의가 어떻게 흘러갈지 관심을 모은다.

/박태홍 기자 pth7285@

‘야당 반발’ 대미투자특별법특위 파행

박수영 野 간사 “일방적 태도 규탄”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특위)’가 12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기관 현안보고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전날(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대법관증원법과 재판소

원법을 두고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특위 시작부터 파행을 겪었다.

특위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전체회의를 열어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을 위원장으로, 정태호 민주당 의원을 여당 간사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을 여당 간사로 선임했다. 특위는 다음달 9일까지

한미통상협상의 후속조치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의 이행과 관련한 법안 8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박수영 특위 야당 간사는 전날 법사위를 통과한 대법관증원법과 재판소원법을 문제삼았다. 박 간사는 “저희는 그동안 (한미통상협상 후속조치를 두고)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하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지만, 국익을 위해 대응적으로 대미투자특별법 특위 구성에 합의했

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어제 법사위에서 국익에 도움 되지 않는 법안들이 강행 통과됐다. (여당의) 일방적인 태도를 이해할 수 없으며, 분노하고 규탄한다”며 “우리 특위도 아무리논 의해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란 보장이 없다”고 분노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장동혁 당대표가 법사위의 사법개혁안 강행 처리에 반발해

대통령과 여당 대표와의 청와대 오찬에 불참했고 본회의 보이콧도 불사했다.

반면, 정태호 특위 여당 간사는 “국민이 대미투자와 관련해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시작부터 다른 정치적 사안을 특위 운영에 끌어들이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지자 위원장인 김상훈 의원은 특위 전체회의를 정회했다. /박태홍 기자